

kiri Weekly

2013.11.18 제259호

포커스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글로벌 이슈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시사점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요 내용과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 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진익 연구위원

요약

■ 확정급여형(DB) 공적 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연금은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라는 전략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발적 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계의 이론분석을 참조하면 확정급여형(DB) 공적 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연금은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

- 모든 금융소비자는 은퇴 후 확보 가능한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생존할 위험(장수위험, longevity risk)에 노출되어 있음.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각 경제주체가 장수위험 관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그런데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

- 금융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보유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라고 부름.

- 개인연금의 낮은 가입률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연금의 비유동성, 상속동기, 대안적 고수익 자산의 존재, 가족 구성원들 간 장수위험 공유,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 행태 등)이 제시되었으나, 연금 수수께끼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

■ 한편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확대가 여의치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임.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안전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가입자가 15세 이상 인구의 약 1/3 수준(국민연금 약 26%, 건강보험 약 37%, 고용보험 약 26%)에 머무르고 있음.
 -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약 8%로 OECD 평균(약 19%)의 절반 정도이며, 국가별 여건(국민부담률, 소득수준, 노령화수준 등)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OECD국가들에 비해 약 2/3 수준임.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약 2020년경부터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 안전망 확대 여력은 매우 제한적임.

■ 그러나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공적 안전망의 확대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장수준을 제고하려면, 민영 보험(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사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OECD의 조사결과를 참조 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12%로 독일(약 30%), 미국(약 25%), 영국(약 1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개인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결과제들이 존재함.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현안(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가입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 형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최근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수수료체계가 불합리하여 연금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음.
 - 해외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수료 체계의 쏠림현상(부가보험료 선취,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강한 상태임.

■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라는 전략방향에 비추어, 사회적 비용은 경감하되 사회적 편익은 제고할 수 있는 형태의 수수료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의 수수료 체계는 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 ② 중개기능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소비자가 개인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상황(“연금 수수께끼”)에서, 중개(모집)인의 지속적 권유 없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움.
 - 개인연금 가입 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보험산업 관련 고용창출(2011년 기준, 보험산업 관련 모집 및 유관업무 종사자는 약 46만 명으로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비하여 약 61% 수준)을 뒷받침하는 재원임.
- 따라서 의무가입의 공적 연금과 비교할 때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에서 거래비용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며, 중개(모집)인 관련 고용창출 효과까지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수료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중개(모집)기능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면, 시장실패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개(모집)인의 소득이 연금 판매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중개(모집)인들 간 단순 판매경쟁이 과도하게 초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개(모집)인과 금융회사 간 교섭력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불완전판매 확대, 금융소비자 수수료 부담 증가, 금융회사 이윤 감소 등이 나타날 위험이 큼.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인연금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개인연금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견인해야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보장내용과 가격이 보다 다변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써 호주의 Super-annuation 관련 다양한 거래플랫폼, 미국의 건강보험 관련 거래소 등을 참조 가능함. [kiri](#)